

현장과 시각

노사는 '2인 3각'



이종태

경제부 부장

기아차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광주·전남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두대 기업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부분파업은 날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금호타이어는 사흘만에 전면파업을 철회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회사의 영업손실을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하자'며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을 두고 사측의 강력한 구조조정 계획에 노조측이 일반적으로 무릎을 꿇었다거나 사측이 노조에 내줄 만큼 내줬다는, 굳이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편가르기'가 드러나고 귀에 거슬린다.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 생산 수단의 소유와 노동의 분리만 있을 뿐,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존재 이유에는 노사 어느 쪽도 적이고 아닌 수 없다.

두 사람이 한쪽 다리를 묶고 달리는 '2인3각(二人三脚)' 경기의 성패는, 두 사람간 절묘한 호흡에 있다. 한쪽이 욕심을 부리면 기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신뢰를 동반한 협력과 동반 의식만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금호타이어 노사도 왜 우리의 운동회에 '2인3각' 경기가 있는지,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250억원대에 달하는 적자에서 탈출하는 일, 글로벌 기업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일은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번 노사 합의의 의미가 크다.

금호타이어와는 달리 기아차 광주공장의 사정은 그리 녹록치 않다. 지난 2일 주·야 2시간, 10일 주·야 4시간에 이어 파업은 더욱 확대될 태세다. 현재 분위기로 보서는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불과 이틀간 부분파업에 기백역원의 손실을 기록한 광주공장은 둘째치고라도, 250여명에 달하는 협력업체 사정은 죽을 맛이다.

광주공장이 재고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때, 필요한 부품만 확보하는 Just-In-Time 시스템을 도입한 탓에, 광주공장 생산라인이 멈추면 협력업체 또한 울스톱할 수밖에 없다.

이미 협력업체 대부분이 올해 매출목표를 지난해보다 낮춰 잡았는가 하면, 수십명에 이르기까지 구조조정을 단행한 업체도 적지않아 광주공장의 18년 연속파업이 몰고온 파장은 만만치 않다.

광주공장에 빠른 시일내에 파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러자면 노사 모두가 성실한 태도로 대화와 타협에 임하는가부터 자성해야 한다. 머리를 맞대고, 무엇보다 껴있으며 어떻게 해야 풀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파업은 더 이상 '그들만의 대결'이 아니다. 지역민 모두가 관심과 책임을 가져야 할 '상처'이자 '부채'이기 때문이다. /jilee@kwangju.co.kr

"10초 간격 총성 두 발 뿐이었다"

금강산 관광객 추가 증언...北 주장 공포탄 사실 아닌 듯

금강산 관광객 피살 현장에서 터진 총성은 두 발 뿐이었다는 관광객의 증언이 또 다시 나와 북측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故) 박왕자(여·53)씨가 피살 당시 현장에서 산책 중이었던 관광객 이모(여)씨는 15일 "새벽 5시경 남편과 함께 해금강 호수를 나와 산책을 하던 중 총성 두 발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첫번째 총성이 들린 뒤 비명소리가 났고 10초 가까이 지난 뒤 다시 총성이 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이씨는 "첫 총소리 직후 비명소리가 들려 북한군이 자살했나 싶었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방이 터져 군인 한 사람이 동료들 쏘고 자신도 자살한 게 아니라 남편과 농담같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당시 정황을 자세하게 떠올렸다.

또, "비명이 여자 목소리로 들려 '살마 여자가~'하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총소리가 나 '그래 군인끼리 싸웠지'라고 남편과 대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유일하게 피살 현장을 목격했던 대학생 이인복(23)씨는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10초 정도의 간격으로 2발의 총소리와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여성 관광객 이씨와 대학생 이씨가 공통적으로 두 발의 총성과 여성의 비명소

리, 총성간 10초 가량의 간격 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공탄(공포탄)까지 쏘면서 거듭 서라고 하였으나 계속 도망쳤기 때문에 사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북측의 사건 경위 설명에 대한 의심을 깊게 하고 있다.

숨진 박씨가 총 두 발을 맞은 것은 확인된 사실이고 북측 주장대로 조병이 공포탄을 쏘았다면 최소한 총성이 세 번 들려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생 이씨가 사건 현장에서 북한 군인을 세 명 봤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측의 조병이 거의 동시에 총을 쏘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연합뉴스

"북측, 사고 당시 CCTV 작동 안했다 주장"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귀환...北 공개 거부 의구심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유력 물증으로 지목됐던 폐쇄회로(CC)TV에 대해 북측이 "사건 당시 작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과연 이 주장이 맞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故)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반복했던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은 15일 오후 국내로 귀환하면서 "북측으로부터 사건 당시 CCTV가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만약 실제로 CCTV가 가동되지 않았다면 그 상황 그대로를 윤 사장에게 확인시

켜 주는 것이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인데도 북측은 아직까지 공개 여부에 대해 일질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북측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CCTV의 공개 자체를 꺼리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대목이다.

지난 2005년 현대아산이 북측과 금강산 해수욕장에 해변마을을 조성하는 데 합의하면서 제공한 CCTV는 물체가 움직이면 자동으로 영상을 포착해 녹화·저장하는 최신식 장비이다.

CCTV가 설치된 철체펜스 너머는 군사지역이어서 감시가 필요한 반면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아 위압감을 주는 조병을 배치시키기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북측으로서는 고성능 CCTV를 가동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현장관리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측이 CCTV를 설치해 놓고도 가동을 안했다는 점, 공포통계도 작동되지 않았던 때가 사건 당일이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윤만준 사장이 방북 후 돌아오는 길에 이번 사건에 대한 남북합동조사 제안을 북측이 또 다시 거부했다고 밝히면서 사건 실제규명 작업도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LA갈비 이르면 이번주 한국 도착

수입업체 '빠있는 쇠고기' 들여와... 이달말께 시판

미국산 '빠있는 쇠고기'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국내에 들어올 전망이다.

15일 육류수입업체에 따르면 일부 수입업체들은 미국에서 14일부터 한국 수출용으로 도축·가공된 물량을 항공기 편으로 수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들어오는 물량 중에는 갈비탕 재료로 많이 쓰이는 '백립'과 국내에서 속칭 'LA갈비'로 불리는 '본인 프로덕트'가 포함된다. 미국산 LA갈비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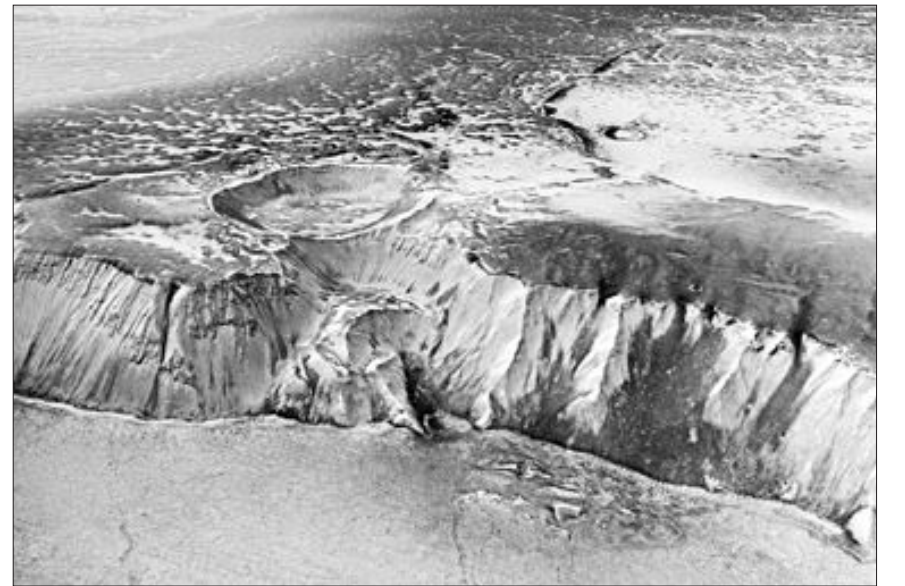
지난 2003년말 이후 4년7개월여 만에 국내에 반입되게 됐다.

수입업체 '네르프'사의 경우 "직거래하고 있는 미국 수출업체 '크리스톤 팜스'에서 생산된 물량 2.5을 항공기편으로 수입하기로 했다"며 "비행기 스케줄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일정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반입 이후 보통 정도의 정밀검역 기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로 시판되는 시기는 일러

야 이달말께가 될 전망이다. 이 회사에서는 배편으로는 월평균 180t 가량을 수입할 예정이며, 배편으로 처음 들어오는 물량은 운반 기간과 정밀검역을 거치면 8월 중순경에야 시중에 풀릴 예정이다.

수입업체 '하이푸드'의 경우도 거래하는 미국 수출업체가 오는 28일 생산하는 물량부터 수입할 계획이다.

수입업체들은 미국산 LA갈비의 가격대를 1kg당 1만5천~1만8천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성 최대 수원지 화성 탐사선 마스 익스프레스가 14일(현지시각) 고해상도 스테레오 카메라로 포착한 화성 최대 수원지 가운데 하나인 'Echus Chasma'의 동쪽 끝에 있는 4천m 높이의 절벽. 'Echus Chasma'는 화성 북쪽으로 3천km까지 뻗어 있는 카세이 계곡의 발상지 가운데 한 곳이다. /연합뉴스

청와대 '자료 유출' 시비 결국 법정으로 가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 노 전 대통령 측이 즉각적인 자료 회수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노 전 대통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만큼 법에 따라 검찰 고발 등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지만 일부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정치적 타결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자료유출 논란을 둘러

"노 전 대통령의 자료유출은 현재로서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하지만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노 전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무단으로 유출했거나 보유된 자료를 악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정법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수순이지만 그에 앞서 정치적인 타결도 가능한 만큼 일단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이 신·구 청와대 간 감정 대립 양상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정법 위반...반환 안될때 고발"

전직 예우...정치적 타결 가능성도

싸고 신·구 청와대가 극한적인 감정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의 자료 유출은 실정법 위반인데다 기밀유출 가능성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인 반면 옛 청와대는 '새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 노 전 대통령을 파렴치범으로 모는 등 모독행위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이 자료회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수 밖에 없어 이번 주가 이번 논란의 향배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고위관계자는 15일

특히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즉각적인 자료회수가 기록원의 입장"이라며 "지난 13일 방문조사가 이뤄진 만큼 노 전 대통령 측이 자료회수에 응할 지를 지켜본 뒤 대응 방향과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금주 내로 노 전 대통령 측에 자료회수를 요구하는 동시행위 태두리 내에서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 측의 편의제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료회수에 응하지 않는 등 극력 반발할 경우 정부 측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사법 대응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여름방학 영어 문법 집중 특별 프로그램' (Summer Vacation English Grammar Intensive Special Program) at CH Chung-Ang Cultural Center. Includes details about the program's goals, dates (July 20-24),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CH중국어문화원' (CH Chung-Ang Cultural Center) summer camp. Features '침구학·대체의학' (Acupuncture and Alternative Medicine) and '연수생 모집' (Recruitment of Trainees). Lists benefits, curriculum, and application details.